남북이산가족 13개월만에 화상상봉

27일 오전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정도섭(68)씨가 화상상봉에 앞서 북한의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빠 생일마다 엄마가 떡 해놓고 기다렸어요"

제 5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가 27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13개 상봉실에서 일제히 열렸다.

1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화상상봉은 서울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화상상봉장 등에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남북 각 60가족 865명이 하루에 40가족씩 스크린을 통해 만난다.

광주상봉장에서는 정도섭(68)씨를 비롯 남쪽에 사는 3가족 14명이 화상으로 2시간씩 반세기 넘게 헤어졌던 북쪽 가족과 재회했고, 서울 상봉장에서는 남측 최고령자인 최병옥(102) 할아버지와 북측 최고령자인 김종남(83) 할아버지를 비롯 20가족이 화상을 통해 상봉했다.

29일까지 하루 40가족씩 상봉

이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화상상봉장에서 한순옥(여·65)씨는 북쪽에 사는 큰 오빠 한장철(76)씨에게 "오빠 생일마다 엄마가 떡 해 놓고 기다렸다"며 울음을 떠뜨렸다.

이날 오전 한장철씨는 남쪽에 있는 동생 재철(70), 순자(여·68), 순옥, 매제 오종환(65)씨 등 6·25 때 헤어진 가족을 화면으로 만났다.

반세기 만에 다시 만난 4남매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은 몇명인지, 아픈데는 없는지, 집은 어딘지 쉴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한씨 남매는 그리운 혈육을 만나 반가웠지만 동시에 눈앞의 가족을 껴안을 수 없는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아쉬움도 느꼈다.

기약없는 이별에 눈물만

순옥씨는 "오빠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 손이라도 잡아보고 하루 저녁같이 집에서 같이 자고 싶고 그러네요"라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한장철씨는 "나는 손이 아니라 너를 업고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북쪽의 한씨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모시겠다며 동생들에게 부모님 기일을 확인하기도 했다.

4남매는 "생각도 못한 상봉을 해서 너무 반갑다. 앞으로 모여 살기 위해 꼭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며 기약없는 이별을 했다.

상봉 개시에 앞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나눈 화상대화를 통해 "지금처럼 일년에 두 세 차례 200~300명 만나는 걸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빨리 해소해줄 수 없다"며 상봉 확대를 제의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북과 남이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6·15 공동선언이 밝혀놓은 우리 민족의 임무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 5차 화상상봉은 지난해 7월 북측의 중단 선언으로 무기 연기됐다가 이달 초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로 다시 열리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리당, 범여권 통합 기치 올려

광주서 첫 결의대회 "모든 기득권 포기…주도권도 행사 안해"

종교계 원로들이 주도하는 대통합 원탁회의를 비롯, 범여권 통합을 위한 정치권 외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신당 추진 결의 이후 처음으로 28일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통합 열기 확산과 세규합에 나선다.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통합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대통합 추진 방향과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 지도부는 이어 국회의원 24명과 함께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 대통합 추진의 의의를 되새기고 언론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되는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광주·전남 결의대회'는 정 의장과 장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강기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창조한국미래구상 고문인 오충일 목사가 '대통합신당과 호남지역의 역사적 소명'을 주제로, 정세현 민화협 상임위원은 '대통합신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김동철 의원은 '대통합신당의 나아갈 길', 송영길 사무총장은 '17대 대선과 평화번영 미래세력의 진로'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대통합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한다.

당 지도부는 대회를 마친 뒤 당 소속 광주·전남 지방의원 및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첫 결의대회를 통해 대통합을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힘을 모아 전국적인 결의대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족된 열린우리당 통합추진위(위원장 정세균 의장)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민주평화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의 연대를 꾀하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이 건설되면 그와 동시에 열린우리당을 해산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합류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말로만 균형발전…낙후지역 배려없다"

이정록 교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세미나'서 주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와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와 전남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세미나' 주제발표(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찰과 과제)를 맡은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정록 교수는 지방정부의 살림과 가장 밀접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 "중앙정부의 재원확대 노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의 부담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지역전략 산업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지않고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업을 선정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시책이 불충분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활력사업도 차별없는 중복 추진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데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분산적·획일적 사업방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 그리고 공공기관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기관을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빠져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정책집행과 관리 등 통합적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추진기구(시스템)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DJ "한반도 6자기구 EU도 참여해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7일 "앞으로 6자회담이 성공한 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보장기구로 상설화됐을 때 남북한에 걸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럽연합(EU)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로마협정 50주년 EU 기념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유럽통합의 소중한 경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동아시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에서 EU와 같은 성공적인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닌 일본이 독일의 성공사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 일본과 더불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F1경주장 허공에 짓나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전남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F1경기장 설계추진 중간보고회를 갖고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대회 경주장을 다기능 하이브리드형 서킷(순환트랙)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코리아 서킷'으로 불리는 이 경주장은 전체 길이 5.684㎞에 평균속도 212㎞/h, 그리고 최고속도 320㎞/h를 낼 수 있는 1.23㎞의 직선구간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특히 일반 자동차 주행트랙과 F1전용트랙을 함께 갖춘 다기능 하이브리드(이종 조합) 서킷으로 만들어지며, 경기를 관람하는 스탠드도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도록 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7월 경주장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9년 말까지 F1경주장 건설공사를 마치고 2010년 하반기 F1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F1경주장을 운영하는데 필수 수익사업으로 여겨졌던 경차(競車) 도입이 무산되고, 각종 특혜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1경주장을 정상적으로 오는 7월 착공하겠다'는 발표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이번 발표에는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빠져있다. 바로 경주장이 들어설 땅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F1경주장을 영암군 삼호읍 난전·삼포리 일대 간척지 130여 만 평에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간척지의 소유권(매립권)을 지니고 있는 농림부가 좀처럼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8월 해남·영암지역이 무주·태안과 함께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F1경주장이 들어설 부지는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땅을 준다는 원칙을 정한 만큼 농림부로부터 '우선 사용승낙'을 받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은 다르다. 전체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승인된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양도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도·양수가격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간척지에 F1경주장을 짓도록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전남도는 땅이 확보되지도 않은데다, 언제 땅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F1경주장 착공 및 완공 일정을 발표한 셈이다.

오는 2010년 F1경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7월 경주장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10년 대회가 무산될 경우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360억 원의 개최권료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남도의 다급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계획을 발표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처사다.

/redplane@kwangju.co.kr